

국가 재정 투자 및 기초학문 육성방안

자생적 학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제언 : 인문·사회과학 분야

최 갑 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1. 머리말

‘문’ 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세계화’의 담론이 크게 유행하면서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과거 ‘반공’이나 ‘조국 근대화’의 구호에 못지 않게 새로운 국시로까지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이 근자의 현실이다. 이 국가경쟁력이 사실상 한국 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재벌)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용어가 우리 사회가 지닌 모순이나 갈등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부

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단지 소수의 재벌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그 호소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예전과 비교해서 우리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의 경쟁력’이 우리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생적인 학문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한국 경제의 뒷받침이 불가결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교육체제, 특히 대학

이 그간의 양적 팽창을 통해 질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한국 경제가 그 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독자적인 지식생산체계의 구축과 기초학문의 육성이 불가결하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학문의 자생적인 기반 : 국가경쟁력과 기초학문

최근 대학사회는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학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 압력의 상당 부분, 특히 재계 쪽으로부터의 압력이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인력을 값싸게 공급받겠다는 알뜰한 상흔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간 대학이 보여왔던 다소간 고답적인 자세에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또 그 압력은 우리 사회가 일정 수준 성장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날의 '천민 자본주의' 식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상징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가 어려우며, 그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이 명실상부한 연구와 교육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다란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압력이 커다란 도전이자 상당수의 대학에게는 존폐의 위기로 닥쳐오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또한 스스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급격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였다. 학생과 교원의 숫자는 1948년 당시에 각각 24,000명과 1,265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각각 1,187,735명과 45,08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¹⁾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65%로 미국(1992년 당시 2.51%)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 비하여 질적 성장은 뒤처졌다. 교수/학생의 비율은 1/19에서 1/26²⁾로 크게 후퇴했고, 도서관과 실험실의 측면에서 볼 때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양적 팽창에 상응할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대학이 일부 국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문의 자생적인 축적기반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기초학문의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대학원에 대한 별도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며, 수준있는 연구를 위해 불가결한 도서관(인문학·사회과학의 경우)과 실험실(자연과학의 경우)의 규모와 설비는 비참할 지경이고, 교육법이나 대학편제 역시 학사

1) 연합통신 편, 『연합연감 - 1996년판』의 자료집, 29쪽.

2) 그간의 통념은 이 비율이 1/30이었다. 실제로 1992년의 통계는 이 비율을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연합연감』이 교수의 수를 과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교수가 대폭 충원되었거나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근자에 교수 충원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3년 사이에 교수의 수가 1만 명이 증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비율은 1/30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다.

과정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히 국제적인 수준을 갖춘 학위논문이 나오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학문의 길에 들어서려는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은 상당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며, 교수에게 국내 대학은 자신의 학문의 소모처에 불과할 뿐 그는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의 연수를 거듭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그야말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학문의 대외의존성은 최근에 들어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의 소위 우수한 대학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특집이 말하는 '기초학문의 위기'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해방 이후 그 어떤 대학에서도 기초학문이 하나의 체계로서 성립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우수한 연구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학문이 계승되어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고, 하물며 학풍이나 학파가 형성되는 풍토가 조성될 수도 없었다. 그러니 학계에 논쟁이 제대로 전개될 리 없었고, 그것이 인신공격이 아닌 생산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사회에서 운위되는 '기초학문의 위기'나 '인문학의 위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국가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일정 정도 확대된 가운데 공학과 같은 응용학문 또는 응용과학에 지원이 집중되어 학문 분야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불균

형으로 기초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느껴 연구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컨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경우 연구비의 대부분이 기초연구와 무관한 용역연구비인 만큼 그 불균형을 곧 기초학문의 위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기초학문의 위기는 전술했듯이 연구비의 상대적인 빈곤에서 야기됐다고보다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의 부재, 제대로 된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서관과 실험실의 미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기초학문의 위기는 또한 정부나 대학당국이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의 경제논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또다른 현실을 반영한다. 그간 교수사회가 상당한 정도로 보였던 타성과 안일함에 비추어 볼 때, 대학사회에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연구여건의 조성과 강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커녕 오히려 대학사회를 옥죄는 결과만을 야기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교수재임용제의 경험은 그 점을 또렷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학생들을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선택을 학과나 개설 교과목의 존재 근거로 삼는 대학경영 역시 기초학문의 위기를 부른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학부교육이 학문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전체의 틀을 놓고 볼 때 교수직이야말로 기초학문의 유일한 보루이다. 대학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많은 사립대학들의 시도가 당장에 필요에 필요한 분야만을 살리고 기초학문 분야의 강화를 줄여가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대

학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처사라 하겠다.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본 특집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과 관련하여 학문의 자생적 기반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자생적이라 함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려는 능동적 자세를 말한다. 그러기에 풍부한 장서와 고도의 첨단시설을 갖춘 도서관이야말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 자생적 기반의 핵심적인 장치인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문화의 기본 단위를 연구의 출발점이자 귀착지로 설정한다. 인문학이 '인간다움'의 연마를 언어를 통해 추구하는 만큼 그것은 언어공동체의 존재를 대전제로 하며, 사회과학이 한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론 구성을 이루해야 함은 차라리 당위적 요청인 것이다. 현재 기초학문, 특히 인문학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학문적 성과를 풍성하게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학문적 정체성(正體性)의 부재에서 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생적인 연구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립적인 지식 생산체제를 수립하여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와 사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외부의 문화와 세계에 대한 다소간 일관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3.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한 제언

기초학문의 육성은 단지 연구비의 증액이나 연구공간의 확보와 같은 대증요법만으로

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지원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학문이 자생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획기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기초학문의 육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학문의 단순 재생산체제에서 확대 재생산체제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기초학문 육성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총체적 사고

그러한 전환은 무엇보다도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한 논의에서 분석이나 고려의 단위가 개별 연구자나 특정 대학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대학사회 전반이어야 한다. 자생적인 지식 생산체제는 단위문화의 존재를 전제하며, 현재는 국민 국가가 문화의 기본단위이다. 대학의 특성이나 대학간의 다양성 또는 역할분담은 전체 대학사회, 나아가 문화의 기본단위라는 준거집단을 상정할 때만이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교육 전반의 틀, 특히 초·중등교육과 밀접히 연관시켜 파악되어야 한다. 양자가 유기적 관계에 있음은 단지 양자의 교육과정이 입시를 통해 계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재생산 구조의 구축을 위해 양자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예컨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는 미국식의 방안보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유럽식의 방안이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훨씬 현실가능

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보다 유기적인 접근방식을 요청한다.

셋째, 교육과 연구란 직접적으로 문화적 체계모니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회재생산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전체 사회와 긴밀히 관련된다. 분석을 위해 교육부문을 고립시켜 파악할 수는 있지만 교육의 문제는 사회와의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예컨대 교육학자나 교육관료 또는 사학 운영자의 배타적인 영역은 결코 아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운위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논의 구조가 지극히 과잉전문적이고 비공개적이었음을 반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학개혁과 관련한 논의에서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을 배제함은 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2) 대학의 역할 분담

대학원 육성에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대학원을 육성할 수는 없으며, 전국을 하나로 묶는 학문세계의 기본단위를 고려할 때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역할분담은 불가피하다. 이 점에서 최근에 제기된 한국 고등교육체계 개편론—연구중심대학/학부중심대학/기술인력양성대학 사이의 기능적 분업—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 분담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학문영역별 연구나 교육 기능의 분담,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기능 분담 또는 상이한 인력배출에 의한 기능상의 역

할 분담 등 몇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³⁾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편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학원이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뚜렷한 독자적인 위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의 실태는 그렇지 못하여 대학원이 학부의 설치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며, 교수 1인당 학생수에서 대학원생의 수가 포함되기는커녕 아예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 대학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최근에야 신설되었다고 하니, 그간 대학원 운영의 부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와 교육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연구중심대학이란 사실상 대학원중심대학으로서 그 학부의 정원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 명문 학부중심대학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학간의 균형발전이 기초학문의 육성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간 우리 대학은 서양으로부터 근대 학문을 수입하는 가운데 학문의 성격이나 비중 또는 본질에 관계없이 모든 학문을 학부과정의 학과에 배치하였다. 이는 교수 충원이 학과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던 관행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서울대의 경우 학과가 100개가 넘고 기초학문 분야, 응용학문 분야, 예·체능 분야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뒤섞여 ‘백화점’이니 ‘잡화상’이니 하는 모멸적인 평가를 피할 길이 없었다. 수많은 학과의 이러한 병렬적인 난립은 우리 학문이 자생적인 축적기반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증좌인 것이

3) 서울대학교,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 연구』 (1994년 10월).

다. 대학사회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연구중심대학이나 일부 학부중심대학에서 기초학문을 중심축으로 하는 학부 및 대학원 편제의 설정은 불가피하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대학원의 특성화 작업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3) 교수 연구여건의 개선—특히 도서관

연구나 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 즉 교수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일이다. 교수의 수가 늘어나면 주당 수업시간이 축소되어 연구의욕이 진작될 것이다. 또 국·공립대나 대부분의 사립대의 경우 안식년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 교수의 대폭적인 증원과 안식년제 이외의 방안은 사실상 심지어 연구비조차도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대학사회에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의 준거가 일개 대학이 아닌 전 대학사회임을 감안하고 연구여건의 개선이 수반되기만 한다면 학문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인문·사회과학의 육성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장치는 도서관이다. 이는 이공계의 실험실 및 기자재에 비견될 수 있다. 도서관은 단순히 여러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한 사회의 학문관과 문화인식을 반영하고 정의하는 문화공동체의 총화요 중심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장서의 규모와 수준을 평가할 때, 특정분야의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소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독보성을 인정받는 수준

(A), 상당한 분야에서 연구가 가능한 수준(B), 대학원 과정의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C), 학부 과정의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D), 기초적인 개설서만을 소장하고 있는 수준(E) 등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사정이 제일 좋다는 서울대 도서관의 경우, A급인 규장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C나 D급의 평점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돋움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의 형편이 그러고 보니 교수들이 스스로 자기 분야의 연구서들을 구입, 소장할 도리밖에 없지만, 그것이 기초학문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B급 도서관(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B급 도서관을 꾸리려면 도서 및 잡지 구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합쳐 매년 대략 2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전에 출판된 도서 및 잡지의 구입을 위한 별도의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대학이 이런 수준의 도서관을 꾸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3개 정도의 연구도서관을 건립하여 권역별로 묶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학문의 자생적인 기반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4) '학문후속세대' 지원 방안⁴⁾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은 학문의 축적기반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점에서 최근에 '다음 세대 학문 연구작업을 주도할 인

4) 이에 대해서는 「학문후속세대 지원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교수협의회보』 제16호(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1993년 4월), 23~53쪽. 특히 김남두 교수의 발제에 크게 의존하였다.

력'이라는 의미에서 '학문후속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그간 대학원은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있고 나이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쯤으로 이해되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있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분위기가 곧 우리 학문의 대외중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학원에 대한 그러한 무반성적인 관념을 불식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생적인 기반을 갖추는 일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다.

물리적 생존이나 사회의 조직을 위한 제반 지식이 유학생을 통해 수입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전 국면이 편성되었던 것이 해방 이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로 보나, 현존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속성으로 보나 이제 그러한 방식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쟁에 필요한 첨단 지식은 더 이상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얻어질 수 없으며,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수입된 외국의 이론으로 규명될 수도 없다. 경제의 유지를 위해,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창출해내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이야말로 이러한 작업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의 원칙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심적인 것은 그 지원이 등록금 정도의 수준을 넘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에게 예컨대 최소한 매달 50여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와 정보를 효

과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조교는 행정업무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시간강사로 역시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이라는 방향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둘째, 학문후속세대의 지원은 능력과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100개에 달하는 일반대학원이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 학생수가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10만 명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지원은 수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여건과 연구수준의 철저한 질적 관리가 대학원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사과정의 정원을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이 바로 지원으로 연결되는 장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지원정책은 이공계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학문과 문화, 중국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넷째, 학문후속세대의 지원정책을 위해 지원부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연구지원은 이원화되어 있다. 과학기술예산의 대종은 과학기술처가 집행하고, 교육부의 학술진흥과는 그 나머지를 다루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교육부 산하의 대학과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지원예산이 제대로 배정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술진흥 기능과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진흥 기능을 통합하여 '학술진흥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5) 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기초학문을 육성하여 학문의 자생적인 기

반을 만들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재정의 조달과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재정 수요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미국조차도 학문세계의 물질 기반을 시장경제의 논리에 내맡기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예산 자체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위의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예산(대학 배분율)이 대폭 늘어야 한다. 둘째,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재정수입의 면에서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재단의 재정적 공헌은 그것이 행사하는 권한과 비교해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의 지원은 사립대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재단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에도 공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어 전국의 대학들이 하나의 학문단위로 묶여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되는 한편, 사립대학은 사학의 특성이 유지되면서 소유=경영의 전근대성이 극복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역할 분담이 교육재정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일 뿐, 일부의 대학을 위해 다른 일부가 희생되는 차별적인 계서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인문학·사회과학의 경우, 기초학문을 육성하여 자립적인 학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핵심적인 방안으로는 교수진의 대폭적인 증원, 연구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대학의 실태는 그간의 양적 팽창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빈약한 교육환경을 보여준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최근에 다소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학원은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못하고, 도서관의 사정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일부 대학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너무도 비참하여 도무지 그것이 문제시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대학, 특히 학부과정이 그간 보여준 성장은 차라리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학이 산업화에 필요한 고급 인적 자원의 거의 유일한 배출처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행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빈약한 교육재정 탓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권은 대학을 국가경영의 시각이 아니라 정권수호의 차원에서 보았으며, 많은 사립대학은 아직도 봉건적이라고 할 족벌체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문의 본산이어야 할 대학에 비리와 부조리가 온존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조정자이자 감독자여야 할 교육부가 그 비리를 방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문제는 현금의 국내·외적 상황이 그러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멀지 않은 장래에 학문의 자립체제를 이룩하지 못한다면, 문화적인 종속이 심화됨은 물론이고 민족의 자존이나 심지어 문명사적 생존권마저 상실할 것이다. 다행스런 것은 우리 사회가 그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로 말미암아 이제 자생적인 학문

기반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 대학이 소모적인 단순재생산의 악순환을 딛고 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기로에 서 있듯이, 우리 경제 역시 이제까지의 천민 자본주의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 걸맞은 질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질적인 전환에서 독

자적인 학문세계의 구축이야말로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

최갑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덕여대 교수, 파리 1대학 프랑스 혁명사연구소 연구원, 미국 워싱턴 대학 방문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생시몽의 사회사상』이 있고, “생시몽의 계급이론”, “보벨의 역사세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
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
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
정·보완할 수 있습니다.